

# 與野 ‘전세 특별법’ 합의 불발... 채권매입 방안 등 입장 차

국토위 피해지원 특별법 3건 논의  
與 “정부가 사기 채권매입 불가”  
野 “피해자 요건 지나치게 엄격”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인정 기준과 지원 범위,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 3건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1일에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정부여당안)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건을 논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 사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합의 시도에 나섰다. 당초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때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피해자 요건이 지나

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 모두 충족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 기망 또는 임대인

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추가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협소하다.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3일 오후까지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

장 맹성규 의원은 “보다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 보증금 기준은 대부분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원 이거나 9000만원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도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강릉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가 다 다르다”며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논의하지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 국토지주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 6일·13일 숙의토론

시민 500명 참여... 생방송 공개  
“선거제도 설계 중요한 역할 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6일과 13일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을 위해 500인의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조사에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500인 시민참여단 공론화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구 크기(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도농복합형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선출단위·의석배분방식·명부 작성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의원정수를 의제로 토의한다.

이번 공론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하여 모집한 500명의 시

민참여단이 본인의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본사(251명)와 4개 지역총국(대전 67명, 대구 48명, 광주 57명, 부산 77명)에 모여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자료집과 영상 자료 제공받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뒤 토론에 참석한다. 시민참여단은 이를동안 발제와 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구성된 공론조사를 거친다.

전문가 발제자·토론자는 하상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범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2인의 국내 선거 제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 ▲1일차 숙의토론

시작 직전 ▲숙의토론 종류 후에 총 3차례 이뤄진다. 주요 조사결과는 오는 13일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하고, 사전에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는 정개특위가 별도로 발표한다.

정개특위가 정치학자·법학자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 역시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5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조사 과정은 일부가 공영방송사인 KBS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4월 13일 한국리서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협력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할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이재명 “SG증권 조작세력 지워고하 막론 엄중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3일 외국계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쏟아진 대량 매물 9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사태를 언급하면서 “작전 세력에 대해 지워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G증권 사태의 파장이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다. 시가 총액 8조원을 증발 시킨 사태로 개미 투자자가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 신뢰도와 건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라며 “이미 지난 4월 초에 관련 제보가 금융위원회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대책 없이 이를 묵개면서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처분할 시간만 벌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차액결제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주가조작 범죄의 원천봉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오는 7~8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만큼은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양국 정상이 잘못된 강제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우리 국민과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책임론 부상

신진·중진 엄중 대응 목소리

설화(舌禍)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여기에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근 ‘공천 녹취록’ 파동에 ‘후원금 쪼개기’ 의혹까지 휘말리면서 책임론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3일 ‘공천 녹취록’과 관련 “지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태 최고위원 입장 자체는 ‘그런 말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동일하다는 의견이며, 사실은 확인된 것 같다”면서도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태 의원이 별도로 사과

를 더 하든 정치적 책임을 지든 이러한 일에 대해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속되는 지도부 리스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고위 선출시 비겁하게 다선들은 숨고 초선, 0선, 신인들의 잔치가 되다 보니 정치역량이 일천한 사람들로 지도부 구성이 됐다. 출발부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었으나 위기가 너무 일찍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잇따른 설화에 대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영훈 기자

##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탈당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의원이 3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를 만나 탈당 의사를 전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방금 당 대표,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여러 사실관계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이 문제를 밝혀나가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로 선당후사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만 의원은 “먼저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 당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당과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결국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갖고 윤 의원과 함께 탈당하고 법적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